“KCC, 도의적 입장표명이라도 했어야 마땅”

전주시의회, KCC농구단 연고지 이전에 깊은 유감 표명… 공식 사과 요구

전주시의회가 전주 KCC이지스 프로농구단의 연고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구단 측에 전주시민과 팬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 KCC가 명문구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주를 연고로 함께 호흡하며 성원을 보내준 시민과 홈팬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구단의 일방통행식 이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특히 “경제적 측면과 홍보효과 등 기업의 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과 홈팬에게 최소한의 도의적 입장표명이라고 했어야 마땅했다”며 통보에 가까운 KCC의 결정을 비판했다. 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막기 위해 의회와 전주시가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회는 “7년 전 전주 잔류 결정으로 약속한 구장 신축이 사업비 증액에 따른 행정 절차 소요 등으로 지연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의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구단 측과도 여러 차례 공식 협의를 진행하며 이해를 구해왔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고지 이전 검토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에는 구단, 팬클럽과 면담 등을 통해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고, 현재의 실내체육관 철거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하고 신축 구장과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경로를 통해 단장과 그룹 회장단 면담 요청 등을 했으나 무산되고, KBL 이사회에 이전 안건 상정 보류 공문 발송 등 최후의 방법까지 이어갔으나 협상은 일방적으로 단절됐다”며 “이런 구단의 행태는 부산 이전을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전주시 행정에서 구단의 이전 빌미를 제공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겸허히 수용하고,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살펴 의회 차원의 향후 대책 노력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있어 스포츠 시설 규모의 효율성과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신축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등을 활용한 다양한 종목의 경기 및 프로구단 유치 등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자원순환 · 새활용 가치 알린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2일 ‘쓰레기, 새로고침 F5’ 개최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앞두고 전주시민들에게 버려지는 자원을 새로운 가치를 가진 물건으로 만드는 새활용 문화를 알리기 위한 문화행사가 열린다.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은 오는 2일 오후 1시, 새활용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쓰레기, 새로고침 F5’를 개최한다. 새활용은 자원순환의 실천 방법 중 하나로,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를 다한 쓰레기가 가치 있는 물건으로 새로고침 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전주시새활용센터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천연자원 보호 △버려진 자원을 다시 활용한 폐기물 감축 △탄소중립 등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기로 했다.

먼저, 새활용 체험의 경우 △플라스틱 병뚜껑 사출체험 ‘플라스틱 원정대’ △나의 옷으로 가방 만들기 체험 △고장난 양산을 수리해주는 ‘양산 수리점’ △폐현수막으로 만든 업사이클 북을 이용한 ‘바다소리 만들기’ 체험 △새활용 소재가 될 수 있는 쓰레기 기부 등이다.

또한, 새활용 전시로는 전남 목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몰액션’(대표 정태영)이 바다에서 직접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소재로 해양산업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풀어낸 설치전시인 다시봄 기획초대전 ‘日用 糧食-일용할 양식’, 입주기업 ‘잇잇’이 주최한 리폼 워크숍 ‘잇잇-고치글라 워크숍 결과전시’가 예정돼 있다.

전주시새활용센터는 △세척된 플라스틱 병뚜껑 50개 이상 △깨끗한 비닐봉투 및 뽁뽁이 20장 이상 △청 소재 의류 2개 이상 기부 시 새활용 기념품을 제공하며, 체험 참여 신청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흥겨운 길놀이 2023 사선문화제 풍년 맞이 길놀이 공연이 열린 지난달 31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관계자들이 풍물놀이를 하고 있다.

전주시, 아중호수길 붕괴 위험지역 안전정비 추진

전주시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과 발맞춰 붕괴위험지역인 아중호수길 급경사지의 비탈면을 안전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와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이 있는 아중호수 진입로의 급경사지(경사도 60~80°)를 안전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시는 해당지역이 재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전북도 등과의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통해 정비에 필요한 국·도비 등 총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추진중인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1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또 급경사지 비탈면 정비사업과 더불어 앞으로 추진될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을 통하여 방문객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인도 개설 및 도로 확장도 이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아중호수 관광명소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를 건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소년 대상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전주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속도’

중소기업 근로자 · 청년 창업인 위해 2026년 입주 목표로 총 168억원 투입 공공임대주택 70호 건립

전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급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6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팔복동 일원에 창업지원주택 24호와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주택 46호 등 총 70호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국비 47억 원 등 총 168억 원이 투입돼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방식은 전주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설계·시공을 담당하는 공동사업자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시공하면 시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관리를 맡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팔복동 일원의 부지 약 5000㎡(1500평)를 확보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 후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동사업자방식은 그동안 LH와 지방공사에서 추진해오던 방식으로, 전주에서는 최초로 시행된다. 시는 기존사례조사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찾아 보완하는 등 최적의 조건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전주국가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 향후 조성될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만큼 신속한 절차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주거공간을 하루빨리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 13~39세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 추진

전주시가 미래를 준비해야 할 청년과 청소년이 가족에 대한 간병 등을 이유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내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신체적·정신적 질병과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가족(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가족돌봄청소년 실태조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가족 부양의 부담을 떠안아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복지급여와 사회서비스, 민간자원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기초주거급여 △기초교육급여 △한부모 △장애연금(차상위)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방식은 시스템과 유선 및 비대면을 중심으로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해서는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복지급여 신청 안내와 일상돌봄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민간자원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원활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시·구·동 업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